

촛불시위와 한국정치: 원인과 과제

허태회 | 선문대학교 · 장우영 | 대구가톨릭대학교

| 논문요약 |

이 글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한 2008년 촛불시위의 촉발 원인과 성격에 대하여 시론적 차원에서 몇 가지 정치이론을 준용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시민운동이 한국정치 발전에 던지는 의미와 과제에 대하여 고찰한다. 연구의 결과 이 글은 촛불시위 등 2000년대 대중운동에서 나타난 한국정치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맹목적인 서구식 성장모델과 발전모델에서 탈피하여 한국정치의 구조적 상황과 고질적 폐해를 고려한 새로운 제3의 발전패러다임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나친 물질만능주의와 맹목적인 성장제일주의사고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둘째, 계층 간 이익세력 간 조화와 균형, 화합과 협력의 공존공생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갈등배태적인 사회제도의 혁신으로 공동체의식을 배양하고 사회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I. 서론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로 발단이 된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를 둘러싼 각계각층의 논란이 뜨거웠다. 기실 누구도 쇠고기 수입 문제가 범국민적 저항으로 확대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하였다. 당초 단순히 청소년들의 ‘광우병 걱정’으로 시작된 논란은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사회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와의 공방을 격화시켰고 중국에는 신임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 철회로 악화되었다. 촛불시위를 기화로 다소 급진적인 운동집단에서는 정부의 퇴진과 대안적 시민정치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며, 학계 일각에서도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논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촛불시위에 대한 대개의 진단은 운동의 정당성 여부와 참여 행태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의미와 과제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촛불시위는 2000년대 초·중반의 다른 촛불시위들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쇠고기 수입 문제가 강한 운동의제의 성격을 띠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 최대 규모의 운동으로 전개되었다는 점과, 더욱이 그것이 촉발된 시점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지지도가 가장 높은 정부 출범기였다는 것이다(장우영 2008a). 따라서 운동의제의 성격이나 정치적 기회구조의 맥락에서 촛불시위의 원인과 과제를 진단하는 것은 한계가 따른다. 이러한 면에서 필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대중운동 발생의 역사적·구조적 맥락이다. 왜 금번 촛불시위는 반미나 대통령 탄핵과 같은 비교할 바 없이 중차대한 정치적 의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선행 촛불시위보다 훨씬 대규모로 장기간 전개될 수 있었던가? 그리고 촛불시위가 본원적으로 한국사회에 요구하는 정치과제는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금번 촛불시위의 원인과 정치적 과제를 논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촛불시위로 표상되는 현대 한국 대중운동의 분석시각을 조망하기 위한 소고이다. 이를 위해서 금번 촛불시위 자체에 대한 미시적 맥락의 논의는 지양하고, 정치이론적 시각에서 대중운동의 발생과 확산을 고찰한다. 특히 민주화과정론, 국가론, 정치구조론의 논의를 준용하여 촛불시위의 원인을

살펴본다. 이어서 민주주의 공고화의 시각에서 촛불시위가 제기하는 본질적인 한국정치의 과제를 제언하기로 한다.

II. 촛불시위의 원인: 정치이론적 해석

금번 촛불시위를 하나의 '특이한 사회 현상'으로 주목해보자면 기존의 정치학 이론에 준거해서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이 '온라인 운동의제의 오프라인 확산', '새로운 운동집단으로서의 청소년과 여성의 등장', '떡거리와 같은 민생문제의 운동화' 등 사회문화적 특이점을 강조하다 보면 촛불시위의 성격을 단일한 정치이론의 틀로 분석하기가 난망하다. 따라서 일반화의 오류를 지양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대중운동이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치이론들을 준용하여 분석해볼 수 있겠다. 즉 민주정치론적 시각에서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다루는 민주화과정론과 '국가와 시민사회의 긴장관계' 측면에서 시민사회의 자율적 공간 확대를 강조하는 국가론이 있으며, 정치체제의 문제점을 전반적인 '시스템의 기능마비와 역할의 한계'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정치구조론이 있다. 물론 이러한 시각들도 이념적 스펙트럼 선상에서 놓고 본다면 좌파적인 구조적 마르크스주의 이론부터 우파적인 엘리트 이론의 시각까지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겠으나, 시민운동의 확산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분석틀로서 대별하여 살펴본다면 민주화 과정론적인 설명, 국가론적인 설명, 구조적인 설명들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1. 민주화 과정론 시각

한국의 대중운동 촉발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설명 이론으로는 민주화 과정론을 들 수 있다. 어떤 국가들이든 역사적으로 대중운동이 민주주의 발전

의 도화선이 되지 않은 나라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국민항쟁 등 현대사에 면면하게 지속된 대중운동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이러한 탈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이행을 설명하는 이론적 자원들로는 전략적 선택이론, 사회운동론, 조절이론, 세계체제론 등이 풍미된 바 있다(김세균·박찬욱·백창재 2005). 민주화 과정론의 시각에서 이해하자면 촛불시위는 민주주의 공고화의 지체 단계에서 촉발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1987년 정치적 거래와 협약에 의해 달성된 민주주의의 이행이 공고화 단계에서 지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대규모 대중운동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최장집 교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2008)에서 한국사회는 1987년 이후의 민주화가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되었음에도 시민사회와 노동세력의 제도적 미성숙 및 국가-시민사회와 자본-노동 관계의 세력불균형이 구조화되었다. 최장집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실질적 측면의 좌절에 주목하면서 향후 한국정치의 과제로서 정당정치의 정상화와 신자유주의에 맞선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강조한다(최장집 2008).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촛불시위는 정당정치의 실패에 따른 정치사회의 저발전 또는 신자유주의의 심화에 따른 양극화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촛불시위에서 등장한 다양한 의제들도 민주주의의 퇴행이나 사회 양극화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민주화 과정론의 견지에서 민주주의 이행기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내면적 민주주의로 공고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이고 강요적인(unilateral and demanding)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의 공분이 촛불시위로 표출된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소위 시민과 정치사회 간의 소통(communication)의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촛불시위는 한국사회의 심화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의 21세기적 발현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금번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주요한 특이성들, 예컨대 ‘인터넷 기반의 운동 확산’, ‘청소년과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 행태’, ‘국민건강과 같은 생활문

제의 운동화' 등 시대적 상황 변화에 토대한 민주주의의 심화 요구가 강력하게 개입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 체제로 발전해 나가는 정치과정에서 새로운 대중운동이 정책투입(policy input)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여지가 강력하게 잔존해 있다. 특히 온라인공간의 다양한 시민미디어들은 기성 언론의 독점적 의제설정을 붕괴시키며 신속하게 운동을 확산시켰던 바, 정보화시대의 대중운동의 조건과 기회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론이 설득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촛불시위를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것은 오늘날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야기한 원인이 단지 '소통의 장애'에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런 주장은 촛불시위로 발현된 우리사회의 병리 문제, 즉 피상적으로 나타난 현상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근본적인 원인, 왜 소통의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정보화 등으로 다변화된 상호작용적 소통 환경에서, 정부의 권위주의적 소통 행태가 촛불시위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그러한 권위주의적 소통을 조장한 사회정치적 맥락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국가론과 정치구조론의 시각을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2. 국가론 시각

국가론(state theory)적인 관점에서 대중운동을 설명하자면 무엇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제기한 신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주목할 수 있다. 국가론은 주로 국가의 발전전략과 관련하여 국가가 시민사회에 갖는 상대적 자율성(relative autonomy)의 문제를 다루는 이론들이다. 특히, 니코스 폴란차스(Nicos Poulantzas)와 랄프 밀리반드(Ralph Miliband) 등 국가 자율성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된 신마르크스주의 진영 내부의 논쟁은 유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신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들은 주로 발전국가들의 발전전략(developmental strategy)과 관련된 논쟁이었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대중시위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 힘은 취약하다. 즉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주변부 국가들

에서의 경제발전은 국가가 시민사회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일관된 개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은 그러한 발전도 일시적 종속적일 뿐이며 결국 국가와 국내자본 및 중심국 이익간의 삼자동맹(triple alliance)을 통해 그들의 이익을 도모할 때 가능한 것으로서 여전히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비판적이며 제약적인 것으로 본다(진덕규 1983). 따라서 이런 신마르크스주의 국가론, 특히 구조적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른다면 촛불시위는 시민사회가 국가에 대해 오히려 더 영향력이 커지고 막강해진 것으로 설명되어야 하는데, 자본주의 세계화의 확산과 신자유주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시민사회가 국가에 대해 더욱 영향력이 커졌다는 기이한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반면 다원주의 또는 자유주의 국가론자들은 국가는 단지 이익갈등 세력 간에 중재자(referee)로 개입하는 역할만 할 뿐 경제발전은 시장 메커니즘의 발현에 조용하여 자율적이며 조화롭게 추진된 경제정책의 결과라고 설명한다.¹⁾ 이들은 작은 국가 또는 작은 정부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자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촛불시위는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된 단계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1987년 이후 민주화 이행단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영향이 크게 증대된 반면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은 점차 약화됨으로써, 오늘날의 대중운동이 보다 강력한 정치적 모멘텀을 획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사회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이 강한 발전추구적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1) 이는 신고전경제학에서 제시하는 수출지향적 경제발전전략, 즉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토대로 한 외부지향적 경제운용전략이 주효했다는 주장이다. 타 국가의 경제와 비교우위에 있는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수출지향적 발전을 꾀한 것이 이들의 성공요인이라는 것으로 사실 당시에 동아시아 경제는, 먼저 수입대체시기(ISI)에 생필품생산확대의 한계와 외환부족, 실업을 증가 문제에 부딪혀 신속하게 대외지향적 산업화 발전(EOI)단계로 전환하여 세계시장에 제조품의 수출로 고속성장의 발판을 만들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성공적인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효과적인 경제발전전략의 주장과는 달리 국가들이 시장 메커니즘의 보장 이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즉 노조와 임금의 통제, 신생산업의 보호, 정부의 직접 보조와 적극적 장려, 국내자본의 효율적 분야에 배분, 국내산업 구조의 재편 등이 그것이다.

발전국가론(developmental state)의 시각에서 이러한 설명은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될 수 있다. 발전국가는 강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고 효율적인 경제 정책 수립 및 운용을 위한 사회정치적 환경 창출을 추구해왔다.²⁾ 그렇지만 민주화 이행단계에서 다양한 이익계층과 시민단체의 출현으로 시민사회의 역할과 역량은 크게 증대된 반면,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은 경향적으로 약화되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 이슈(critical issue)의 등장과 정부의 정책대응 실패가 거대한 대중시위를 더욱 크게 촉발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정동근 2003).

더욱이 과거의 강력한 발전국가의 외피가 얇아지면서 국가자율성이 약화된 반면 시민사회가 대중운동을 촉발할 수 있는 구조와 기회가 확장되어왔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다원주의 국가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한국의 국가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강력한 발전국가가 아니라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에 토대해서 이미 선진 다원주의 국가로 진입하였기 때문에, 국가는 이제 더 이상 정책집행자라기보다 이익갈등의 중재자로 역할을 제한하게 되었다는 설명으로 대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찌 되었든 이러한 국가론의 시각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대중운동 확산은 국가 자율성이 약화와 시민사회의 성장에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변화된 정치사회적 조건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해나가는 나 하는 것이 한국정치의 과제가 될 것이다.

3. 정치구조론 시각

정치구조론(political structuralism)은 대중운동의 촉발에 대하여 주행위자(agent) 역할보다 사회의 구조(structure) 또는 제도(institution)에서 원인과 해법을 규명하려는 이론들을 지칭한다(이호철 1996). 이러한 시각에서 촛불시위는 한국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제도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 사실상 경제발전에 성공한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과 남미 국가들을 비교하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강한 자율성을 갖고 일관된 발전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금번의 촛불시위는 물론 노무현 정부 출범 전후로 촉발된 일련의 촛불 시위들도 같은 맥락에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반대운동도 단지 국면적으로 첨예한 정치적 이슈에 기인하였다기보다는 87년 체제에서 배태된 제도와 정치문화—5년 단임제를 포함한 제로섬식 선거제도와 이질적인 이해와 요구를 포용하지 못하는 경직된 정치문화 등—가 근본 원인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한국사회는 1987년 헌법개정 이후 20여 년간 경직된 정치제도와 갈등적 정치문화가 해소되지 못한 반면,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나 참여 욕구는 크게 진일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제 또는 노후한 정치패러다임의 한계가 집적되어 폭발적인 대중운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배타적 권력구조 그리고 당파적 정치문화는 한국 제도정치의 조정기능을 약화시켜온 것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해왔다. 주요 사회 정치적 이슈들은 협력과 합의보다는 당파적 대결에 의해 파국적으로 해소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5년 단임제, 소선거제, 지역주의 정당, 분점정부’ 등은 승자독식 혹은 정글게임을 조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개발과 통치역량 강화를 뒷전으로 미루는 폐해를 낳았다. 결국 이는 민주화 이후 ‘준비되지 않은 정부들’의 반복적 출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들은 면밀한 정책 비전과 역량 없이 ‘개혁’을 명분으로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에 치중해왔다. 이 과정에서 구 기득 세력의 반발이나 저항도 필연적이었다. 집권 3개월 만에 이명박 정부의 국민 지지율이 10%대로 급격히 추락한 것도 정책 파행과 취약한 통치역량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더구나 보다 심각한 것은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야당과 그 지지층이 반발할 뿐만 아니라, 좌우 그룹에서 배제된 여당 내 비주류와 중간 집단이 잠재적 불만세력으로 구조화됨으로써 집권 기간 내내 소위 ‘개혁 공방’이 범사회적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구조적이기 때문에 5년 뒤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5년 후에 다시 총선과 대선을 거쳐 새로운 정부와 여당이 출범하더라도 이러한 권력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여야 대립과 여당 내부의 갈등·분열로 인해 결국 ‘소수의 권력엘리트 대 다수의 불만세력’ 구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준비되지 않은 정부가 개혁과제

를 파행적으로 강행하는 경우 침해한 이익갈등 이슈가 빈발하게 된다. 그리고 집권세력의 정책 역량과 지지도가 약화된 상황에 이르면 결국 제도정치는 위축되고 그 공간을 대중운동이 차지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가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근래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87년 체제의 개혁’ 또는 ‘개헌론’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본격 추진할 필요가 있다.³⁾ 다음 절에서는 각 정치이론의 시각에서 살펴본 촛불시위의 원인을 토대로 한국정치의 발전과제들을 논의하기로 한다.

III. 촛불시위 진단과 한국정치의 과제: 문제와 처방

앞 절에서는 촛불시위의 촉발과 관련해서 주요 정치이론의 시각을 차용하여 최근 한국사회 대중운동의 원인을 고찰해 보았다.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발전을 전제한 측면에서의 민주화과정론, 국가와 시민사회의 긴장관계 측면에서 시민사회의 자율 공간 확대를 강조하는 국가론, 정치체제의 문제점을 전반적인 시스템의 기능 마비와 역할 한계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정치구조론이 그것이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시각을 통해 살펴본 촛불시위의 의미는 무엇이며 한국정치 발전에 어떤 과제를 제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권위주의적 소통

금번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도화된 정보화 환경이 이명박 정부의 졸속적인 쇄고기 협상에 맞서 촛불시위를 폭발시킨 도화선이 되

3) 최근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 국민들 상당수가 개헌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간조선』 2008.6.30, “개헌을 생각한다” 참조.

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보화의 진전은 정보의 소통과 공유를 확대하며 시민의 정치참여와 정책투명성을 높여왔다. 인터넷은 종래의 매스미디어와는 달리 시민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메시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 붕괴, 게이트키퍼의 해체, 쌍방향적인 실시간 소통을 구현한 인터넷은 종래의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을 일거에 붕괴시켰다. 정치적으로 이는 기성 권력이나 언론의 의제설정(agenda-setting)을 약화시키고 평등한 정치행위 주체로서 시민의 정치적 위상을 제고시켰다. 즉 인터넷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의제설정과 여론형성 메커니즘은 일상정치(everyday politics)를 촉진해왔다. 그리고 권력 변환기에 인터넷은 자발적인 시민 조직화와 동원 기제로 활용되었다. 2000년 사이버 총선연대 활동, 2002년 노사모 선거캠페인, 2004년 온라인상의 탄핵반대운동이 그 예들이다(성동규·라도삼 2000; 장우영 2006a; 2008b).

특히 금번 촛불시위의 경우 웹 2.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보화 환경에 토대해서 확산되었다. 웹 2.0은 개인 미디어와 SNS(Social Networking Site)에 바탕해서 네트워크 상의 개방, 참여, 공유를 가속화하는 정보화 패러다임을 일컫는다. 예컨대, 다음 아고라와 같은 포털 공론장을 통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발현, 블로그를 통한 거대한 의제확산 네트워크의 구축, 소규모 커뮤니티인 카페를 통한 신속하고도 광범한 시민 조직화와 동원, 아프리카와 컬러TV 등 UGC(User Generated Content) 채널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오프라인 네트워킹 현상이 그것이다. 이러한 웹 2.0 참여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의제설정과 여론반전을 무력화시키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제형성과 확산-여론형성-조직화-정치동원 메커니즘을 선순환적으로 촉진하였다.

이렇듯 정보의 소통과 공유가 비할 바 없이 확대된 웹 2.0 환경에서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집행 입지는 크게 축소되었다. 앞의 정부들도 전자정부 사이트 구축 등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행정편의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참여를 촉진해왔다. 즉 인터넷은 시민과 정부의 정책 거버넌스 기제로 역할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시민배제적 정책 추구는 정보화 환경에서 재편된 정부-시민 관계에 역행하였다. 그럼에도 촛불시위의 원인을 괴담과 배후에서 찾는 사고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다. 더욱 큰 문제는 촛불시위를 기화로 미디어에 대한 통제를 새 정부가 체계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슷한 미디어 규제 또는 관할 기구에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 출신들이 대거 낙하산으로 임용되고 있으며 KBS와 YTN의 무리한 인사 강행과 MBC PD수첩에 대한 정부 고발도 같은 맥락에서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의 경우 괴담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정부의 억압 강도가 더욱 크다. 세무조사와 강압적 댓글 삭제 등을 통한 포털에 대한 압력, 촛불시위를 생중계한 아프리카 사장 구속, 인터넷종합보호대책 추진,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 실명제 확대가 일사분란하게 시도되고 있다. 요컨대, 노태우 정부의 언론자유화 조치 이래 가장 억압적인 미디어 규제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미디어 규제가 정치적 통제의 맥락에서 추진됨으로써 미디어 권위주의로의 퇴행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사회에서 시민은 미디어를 통하여 현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미디어 의제(media agenda)가 곧 공중의 의제(public agenda)로 전환된다. 이러한 면에서 정치과정에서 미디어의 정치적 권리와 패권의 향방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시민미디어로서 역할해온 인터넷의 정치적 통제는 아래로부터의 의제설정과 여론형성을 억지함으로써, 시민의 정치참여를 약화시키고 정부의 권위주의화를 가속화시킬 소지가 대단히 크다(장우영 2006b; 황성기 2000).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UCC 나 웹 2.0 환경 같은 새로운 정보환경의 변화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제형성과 확산-여론형성-조직화-정치동원 메커니즘을 순환적으로 촉진시킨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렇듯 정보의 소통과 공유가 비할 바 없이 확대된 웹 2.0 환경에서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집행 입지가 크게 축소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은 미디어 규제의 성격이 정치적 통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의제설정과 여론형성을 억지함으로써, 시민의 대중운동 참여의식을 자극하고 권위주의로의 정부의 회귀를 가속화할 소지가 농후하다. 이렇듯 촛불시위를 촉발시킨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변화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의 정부의 권위주의적 소통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금번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청소년과 여성들의 정치사회화와 적극적인 참여는 정치적 소통주체들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방증으로서, 현대 한국의 정치과정에서 새로운 정책투입 요소로 자리매김해나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측면을 간과하거나 억지한다는 것은 한국사회가 공고화된 민주주의 발전해나가는 데 중요한 기제를 상실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 실패

금번 촛불시위 촉발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정부의 '정책 실패(policy failure)' 문제였다. 특히 이러한 정책실패의 핵심 요인은 사회적 공론화와 정책 투명성의 부재였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새 정부의 정권인수 과정에서 졸속적이고 즉흥적인 처사를 통해 예고되어왔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촛불시위도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적극적 협상을 통한 국가이익의 추구를 포기한데서 비롯되었다. 전반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 방식은 거버넌스(governance)에서 거버먼트(government)로 회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금번 촛불시위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서 발생하였다. 시위 규모도 민주화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 5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1,707회에 걸쳐 연인원 3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항쟁으로 표출되었다. 사실 민주화된 사회에서 국민과 새로운 정부 간의 허니문 기간에 이 같은 대규모 시위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으며 납득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이명박 후보는 560만 표라는 역대 대선 사상 최대 표차로 여당 후보를 제압하고 정권 교체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연이은 총선에서 여당은 과반수를 넘는 민주화 이후 최대 의석을 차지하며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후견집단으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백하고도 치명적인 정책 실패 또는 반대세력의 강력하고도 대단히 조직적인 대중동원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면에서 정부를 비롯하여 일부 세력은 괴담 또는 배후를 시위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시위의 발생과 전개 양태를 관찰하자면 그 본질적 원인은 졸속적인 쇄고기 협상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주지하듯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는 인수위 시절부터 예견되어왔다. 단적으로 고소영·강부자 내각으로 비난받아온 인사파동, 일명 어린지 사건으로 회자되었던 설익은 교육정책,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운하 밀실 추진 등이 그것이다. 정부 출범 이후로는 환율정책 실패와 물가폭등 등 이명박 대통령 선출의 근거가 되었던 경제성장 공약의 실현이 조기 붕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한 한-미 동맹론,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독도문제 등 외교정책에서도 난맥상을 노출하였다. 요컨대 실용주의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 총체적으로 좌초되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실패가 사회적 공론화와 정책 투명성의 부재에서 기인하였다는 점이다. 즉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이익 표출을 배제하고 정부가 독주함으로써 정책 파행을 자초하였는 바, 특히 성과지상주의적 사고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밀실정책형태를 부활시킴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정책실패 문제는 향후 시민사회의 이익표출과 정책참여 욕구를 정부가 어떻게 여하히 수렴하고 제도화할 것인지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 접어들어 정책의제가 양적·질적으로 다양화·복잡화됨으로써 이해세력의 통합과 참여가 정책결정의 전제가 되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서창록·이연호·곽진영 2002). 이런 면에서 시민사회의 포용과 협력적 파트너십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은 과거의 거버넌트로 회귀하고 있다. 이러한 과거 회귀적인 정책입안이나 집행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퇴행시키거나 신권위주의 정부를 등장시킬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거버넌스적 결정과 집행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장치의 고려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3. 퇴행적 제도: 정치사회 차원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행 단계를 완료하고 공고화 단계로 진입하였다. 적어도 절차적 수준에서 게임의 규칙이 확립되고 주기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왔다. 헌팅턴(Huntington)이 민주주의 공고화의 지표로 제시한 두 차례의 정권

교체에도 성공하였으며 민주화 이후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의 반복적 등장은 정치 효율성(efficiency)을 저해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와 의회 간의 권력분할과 상호견제를 촉진하였다. 지방자치제의 확대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지방의 자율성을 증진시켰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과거의 유산을 탈피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협약에 의한 이행(transition by pact)이라는 한국 민주화 과정의 특성은 권위주의 세력의 온존과 보수 헤게모니의 관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이는 과거와의 급격한 단절 대신 보수적 민주화를 추동해왔다. 이 대가로 이념적 협애성과 지역주의의 결합에 근거한 불안정한 대표체계를 고착시켜왔다.

1987년 양 김의 분열을 통한 민주주의 이행 선거, 1992년 3당 합당과 호남 배제구도를 통한 김영삼 정부 등장, 1997년 자민련과의 연대와 영남 역포위 구도를 통한 김대중 정부의 등장은 모두 지역주의 선거의 특징을 띠었다. 정치관계법 개정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통하여 온건 좌파가 제도정치로 수용되었지만 이념적 기반은 매우 취약했다. 여기에 제로섬 게임을 구조화한 배타적 선거제도는 권력경쟁을 더욱 심화시켰다. 또한 합의형 정치문화와 타협의 정치기술도 거의 발전되지 못하였다. 의회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는 이러한 권력경쟁과 후진적 정치문화의 백미를 보여준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부터 주요 정치적 의제가 점차 의회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법리적 판단에 의거하는 소위 '헌법재판소 정치'가 만연해왔다.

여기에 정치사회의 미성숙으로 인해 시민과 대표 간의 간극은 더욱 벌어졌다. 단지 총선 승리를 위한 당원들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공천경쟁은 18대 총선에서 막을 내렸다. 반면 투표율이 46%로 급락하면서 대표성 없는 대표(representative without representation)의 선출 시대로 접어들었다. 금번 촛불시위가 장기화된 데에는 정당정치가 실종된 탓을 빼놓을 수 없다. 여야 모두 시민사회의 이해와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데 실패하였다. 특히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점유한 여당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시민으로부터의 정치적 투입보다는 정부로부터의 정책 산출의 후견자로 자리매김하였다. 야당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쟁적 리더십을 구축하지 못하였고, 노동법 이후 처음으로 등원 대신 거리의 정치에 합류하는 상황을 연출하였다. 오랫동안

동안 권력경쟁에 함몰됨으로써 선거전문가정당(electoral-professional party)의 구조적 착근은 한국 정당의 정책정당화를 가로막아왔다. 그런 탓에 금번 촛불시위 정국에서 정당은 완충 능력이나 대안을 선보이지 못했다.

이렇듯 제도정치가 운동정치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퇴조는 더욱 확연히 확인되었다.⁴⁾ 이러한 면에서 촛불시위 과정에서 제기된 직접민주주의로의 전환 주장은 정당정치에 빠져린 성찰을 요한다. 그럼에도 18대 국회 개원이 두 달이 넘는 시점에서 원 구성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치문화의 고질적 병폐를 드러낸다. 전임 정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잃어버린 10년 탓으로 모든 문제를 되돌리는 여당의 자세에서 정치적 책임과 비전을 읽을 수 없다. 동참도 타협도 없이 촛불시위를 관망하며 정부의 실정에 안주해온 야당도 마찬가지로 대안세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1988년 헌법 개정 이후 20여 년간 경직된 정치체도와 갈등적 권위주의 문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정체되어왔다. 반면 그동안 국민들의 정치의식이나 참여욕구는 이보다 훨씬 더 앞서 제도정치의 실패에는 대중운동으로 대응해왔다. 따라서 대중운동의 공과를 운위하기 이전에 제도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제는 정책정당화, 탈지역주의 선거 경쟁, 합목적 정치문화 기율, 정부로부터의 여당의 독립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의 구축이 될 것이다.

4. 퇴행적 제도: 헌법 차원

촛불시위가 촉발된 지난 5월부터 대통령의 지지율은 10~20%대에 머물렀다.

4)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론에서 최장집 교수의 주장처럼 한국사회는 1987년 이후 진행된 민주화가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최장집은 민주화의 실패로서 정당 정치의 실패와 실질적 민주화의 좌절을 예로 들면서 향후 민주주의 과제로서 정당정치의 정상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항한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강조한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최근의 촛불시위는 '정당정치의 실패에 따른 자연적인 제도권 밖의 대중동원'이나 '신자유주의의 심화에 따른 양극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임기 초반의 대통령에게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나 다를 바 없다. 촛불시위가 막을 내린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극복되지 못하였다. 임기 중·후반부터이긴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동일한 선례를 보인 바 있다. 리더십보다 제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자면, 왜 그러한가보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진 시점에 와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철회는 대통령과 정부의 권위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신을 고착시킴으로써 정부 정책의 파행을 악순환시킬 것이길 때문이다.

금번 촛불시위에서 중고생들이 들고 나온 피켓 구호 중 하나가 “대통령은 리콜이 안 되나요” 였다. 이 구호에서 우리는 최고 리더십에 대단히 크게 의존하는 대통령제의 치명적 약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부연하면 오도넬(O’ Donell)이 역설한 위임민주주의(delegateive democracy)의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위임민주주의는 합법적 선출을 근거로 통치 위임을 주장하며 정부가 시민사회와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통치 현상을 일컫는다. 따라서 제도적 방책이 부재할 경우 정부의 독주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 절대적으로 의존해오던 3김 리더십의 퇴장 이후 통합 리더십의 창출에 실패해 오고 있다. 더욱이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는 단순히 리더십의 실패를 넘어 정부실패와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할 것인가? 적어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과정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이나 정치사회의 역량에 토대해서 이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할 때 헌법 수준의 제도 변경 없이 이 문제를 해소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탈 위임민주주의를 위해서 헌법 개정은 소위 87년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우선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는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단임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반면 임기의 제약으로 정부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업적주의의 폐해를 노정해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기 초반부터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를 도입하는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즉 정부정책을 중간 점검하고 교정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말한다. 중간평가 방식으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는 소모적인 정치적 대결 또

는 정략적 접근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 노태우 전 대통령 중간평가 논쟁 당시 그 정치적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양 김의 정략적 접근으로 말미암아 폐기된 경험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대안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연대 책임을 묻는 국회의원 중간선거의 도입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 경우 현행 국회의원 제도를 양원제로 바꾸어 2년 주기로 의석의 절반씩 선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중간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신임은 물론 정당의 책임정치를 동시에 물을 수 있어, 여당의 대등한 당정관계 구축과 시민사회와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야당의 대안 능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요컨대 5년 단임제를 포함한 제로섬식 선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개헌을 통해 한국정치의 폐해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차제에 시민사회의 발전을 포용하지 못하는 경직된 정치문화를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과 제로섬 게임식 선거제도로 인해 배타적 권력구조를 만들었으며, 편협한 정치문화로 인해 정당정치는 물론 상생과 화합의 포용정치가 실종되어 제도정치의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면 단순한 5년 단임제의 개헌을 넘어 한국사회의 정치적 변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제도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것은 촛불시위의 요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의 자율성보다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제도, 정책의제화 단계에서부터 결정과 집행까지 공론화와 투명성을 요구하는 정치규범의 정착, 정당과 의회 등 제도정치의 책임성 강화 등을 고려한 제도 패러다임이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새로운 정치발전 패러다임으로써 거시정치학에서 미시정치학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즉 기존의 국가중심, 성장중심, 시장중심에서 보다 더 국민중심, 복지중심, 민생중심으로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가경제는 국민경제로 국가발전은 국민개인의 발전을 지향하며 다수와 소수의 이익을 동시에 포용하는 수요자 중심적인 정치발전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다.⁵⁾

5) 해방 이후 지난 50여 년간의 한국사회는 전쟁과 분단, 군부 권위주의 통치의 어두운 시기를 거치면서도 한편 압축적 산업화와 기술혁명으로 고속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과

과거 정치패러다임에서는 정치통합을 가져오는 리더의 자질로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중시하고 일방적 소통을 통한 정책결정비용의 감소를 중요시하였지만, 이제 다원화된 국민중심의 패러다임에서는 여론의적 수렴과 설득을 통한 민주적 리더십이 요청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김호기 2008). 구체적으로 향후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정치발전 패러다임의 방향으로 첫째, 지나친 물질만능주의와 맹목적인 성장제일주의사고에서 탈피하여야 하며, 둘째, 계층 간, 이익집단 간 조화와 균형, 화합과 협력의 공존·공생 문화를 지향해야 하며, 셋째, 지나치게 이기적-갈등배태적인 사회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공동체의식의 배양과 인간성의 함양을 통해 행복감과 만족감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할 것이다. 요컨대 맹목적인 서구식 성장모델과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한국의 상황과 고질적 폐해를 고려했던 새로운 제3의 정치발전 패러다임을 확립하자면 결국 헌법 차원의 제도 변화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로 발단이 된 촛불시위가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정치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분분하였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부의 축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런 물질적 향상과 경제력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과 생활만족도는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 세계 경제력 비교에서 10위권인 우리 한국이 행복지수(GNH)로는 100위권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도자들은 아직도 20세기식 발전모델인 경제성장제일주의로 국민을 현혹시키려 하고 있다. 국가의 경제력 증대와 GNP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제로섬 상황에서 이제 과연 국가경제의 발전의 의미는 무엇이며 경제성장의 목적은 무엇인지 새로운 자각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 무조건적인 서구식 발전모델과 맹목적인 성장우선주의의 문제점과 폐해를 되짚어보고 21세기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발전 패러다임을 개발·추진할 필요가 있다.

촛불시위의 원인과 성격을 이론적으로 조명하려는 작업이 시도되었고, 이념집단들 간에는 진보운동의 승리로 자축하거나 좌파를 시위의 배후로 지목하여 불온한 시민운동으로 매도하려는 주장이 대립되어오기도 했다. 학계를 비롯하여 범사회적으로 촛불시위를 긍정적으로 보는 논자들에게 그것은 직접민주주의의 21세기적 발현 또는 시민주권의 회복으로 해석되는 반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논자들에게 그것은 좌파들의 새 정부에 대한 집단저항 또는 반발로 치부되거나 국가시스템의 기능마비 현상으로 주장된다. 이 논문은 이처럼 논란을 빚고 있는 촛불시위의 촉발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시민운동이 한국정치 발전에 어떤 의미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먼저 촛불시위의 발생과 관련하여 대중운동을 다루고 있는 정치이론들, 즉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다루는 민주화과정 이론들과 국가와 시민사회의 긴장관계 측면에서 시민사회의 자율 공간 확대를 강조하는 국가론적 시각, 정치체제의 문제점을 전반적인 시스템의 기능마비와 역할 한계의 측면에서 규명하는 정치구조론의 시각에서 운동의 촉발과 확산 원인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시각을 통해 살펴본 촛불시위의 중요한 의미로는 정부의 권위주의적 소통, 정부의 정책실패, 제도정치와 헌법 차원의 질곡에 대한 개혁 처방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금번 촛불시위는 그 양식에 있어서 탈근대적 대중운동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정보화 기제의 적극적인 정치적 활용, 청소년과 여성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운동주체의 등장, 민생의제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 등은 종래의 대중운동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운동의 본질적 요구는 참여 거버넌스의 지속적 발전과 대의제 책임정치의 강화였다. 따라서 2000년대 대중운동의 키워드로 각인된 촛불시위는 정부와 의회·정당의 정치적 책임성이 체고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더욱 큰 규모로 분출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촛불시위와 의미와 정치적 과제에 대한 범사회적 진단과 해법의 제시는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세균·박찬욱·백창재. 2005. “한국정치.” 『정치학의 대상과 방법』. 서울: 박영사.
- 김호기. 2008. “최고기 정국 여름 뜨겁게 달구다.” 『월간 중앙』, 7월호.
- 서창록·이연호·곽진영. 2002.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 개념과 쟁점에 관한 소고.” 『거버넌스의 정치학』. 서울: 법문사.
- 성동규·라도산. 2000.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서울: 한울아카데미.
- 이호철. 1996. “행위자와 구조, 그리고 제도: 제도주의의 분석수준.” 『사회비평』 14호. 서울: 사회비평사.
- 장우영. 2006a.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회운동.”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정책』 13(3).
- _____. 2006b. “인터넷 규제의 정치.”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4(1).
- _____. 2008a. “인터넷은 어떻게 촛불시위를 발생·확산시켰는가? 21세기정치학회. 『동계 학술회의 자료집』.
- _____. 2008b. “인터넷과 선거캠페인.”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42(2).
- 정동근. 2003.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문제 및 방안.” 『시민사회론』. 서울: 법문사.
- 주간조선. 08/06/30. “개헌을 생각한다.”
- 진덕규. 1993. 『현대 정치학』. 서울: 학문과사상사.
- 최장집. 2008.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 황성기. 2000.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 규제.”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6(3).

[ABSTRACT]

Candlelight Vigils and Korean Politics

Huh, Tai-hoi | Sunmoon University

Chang, Woo-young |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is paper investigates the major cause and characteristic features of 2008 Korean candlelight vigils by making use of some political theories. Candlelight vigils was a new type of social movement in the respect of resource mobilization and participation mode. Citizens armed with ICTs and post-materialistic value led candlelight protest. Especially youth and women arose up as new leading political actors in the street demonstration. A large-scale demonstration provides some political meanings and tasks with Korean society. First, to consolidate democracy requires to foster communication between citizen and government. Second, political parties independent on government have to aggregate and mediate civil interests and demands. Third, political institutions to promote civil participation have to be richly created.

Key Words | candlelight vigils, civil protests, communication failure, Korean politics, policy failure

